

 <b>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b> <small>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small>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20. 12. 7.(월)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02-774-4154)	

##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소비자문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주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26일(목) 오전10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소비자기본법 40년 평가와 개선방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기본법 4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9월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 등으로 소비자기본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운동의 관점에서 소비자기본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하여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평가와 개선방향”을 개최하여 소비자기본법 40주년 평가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운동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소비자기본법세미나는 주경순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환영사와 권오승 명예교수(서울대학교)의 축사로 시작하였고, 여정성 교수(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성천 박사(소비자법 연구소 소장), 박성용 교수(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후 박명희 대

표(소비자와 함께), 장박원 기자(매일경제), 김성숙 교수(계명대학교 소비자학과), 변응재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 김성천 박사는 “소비자기본법 40년 연혁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 40년 연혁을 정리하여 소비자기본법 40년을 평가하며 “새로운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운동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소비자기본법 4.0시대에는 소비자주권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박성용 교수는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비교 분석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체계가 마련되어 소비자정책이 개인 소비자들의 후생증대 및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이바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서희석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소비자기본법 상 집단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4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단체의 관점에서 현재 소비자기본법의 문제점 및 향후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며, 소비자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소비자문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문제점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다양한 법들의 발전방안 및 그 실현 가능성 모색을 위해 힘쓸 것이다.